

환동해 복합관계망의 개념화에 대한 일고*

권세은**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환동해 복합관계망의 실제 |
| II. 지역에 대한 관계론적 이해 | V. 결론 |
| III. 환동해의 재인식 | |

| 논문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환동해 지역성을 복합관계망으로 개념화하는 작업에 있다. 현대 학문적 사유에서 실제의 '실체'보다는 '관계'에 중심을 두는 관계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에 대한 존재론적·인식론적 논의에서 관계적 개념화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환동해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 지방 등 다양한 관계자가 지구-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상호 관계하면서 국가화-지역화-지방화 수준의 중첩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은 주체 중심에서 연결 중심까지 매우 넓게 펼쳐져 있다. 지역성이 영토 중심의 민족국가 관점에서부터 연결망 중심의 탈국가 관점까지 다양하게 환원되면서 특수한 지역담론이 상황에 따라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복합관계론이다.

- 주제어: 환동해, 지역성, 관계성, 복합관계망, 관계적 존재론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이 논문은 '제3회 환동해발전포럼 국제 심포지엄(2015)'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임.

** 경희대 러시아어학과 교수.

I. 서론

본 글의 목적은 환동해(East Sea Rim)의 지역성을 관계망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가 보편화되면서 지역 행위자들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성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 성격이 갈등·분쟁 측면에서 해석되기도 하고 협력·상생 측면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모순적 상황이 ‘아시아 역설(Asia’s paradox)’이라는 용어로 함축되고 있다. 지역성이 한편으로는 민족국가 논리로, 다른 한편 지역국가 또는 네트워크 논리로 환원되기도 한다. 이런 상호 모순적인 논리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실재(實在, reality), 그리고 그 구성요소 간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현시점에서 환동해 정세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정세를 한편에서는 ‘지정학적 귀환(return of geopolitics)’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의 심화(enlargement of regionalism)’로 해석하고 있다.¹⁾ 환동해의 불안한 안보환경이 부각되면서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협력담론이 호소력을 잃어가는 듯하다. 힘과 국가의 논리가 중요하게 작동하였던 냉전의 시대로의 회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통국가를 향한 일본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 전략적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승전 70주년 기념식 참석 후 중·러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양국은 동북아 각국의 이익과 관심을 고려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새로운 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반도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들의 지정학적 이익들이 충돌하고 있다.

1) 지정학적 귀환의 논리에 따르면 유럽에서 러시아, 아시아에서 중국, 중동에서 이란의 연합 세력이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에 기초한, 미국식 규범 및 질서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Walter Russell Mead 2014). 반면에 지역주의 심화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이란의 행위는 지정학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서구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에 포위되어 가고 있는 국가들의 일시적인 반발이다. 이들 중 어떤 나라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다고 본다(G. John Ikenberry 2014).

한편 자원개발, 에너지, 물류, 환경 등 환동해 협력 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협력 방안들이 국가, 지방정부, 기업체 차원에서 선인적 협력을 넘어 구체적 제시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정책’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일본의 ‘지방 창생계획’,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 2025’ 및 ‘선도지역개발계획’ 등 다양한 지방정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한반도 통일 방안에서, 특히 지방의 발전 전략 차원에서 지역협력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환동해에는 분리·변방 이미지와 연결·중심 이미지가 중첩되고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환동해는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이 지역은 국민국가의 영토화 과정에서 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로부터 분리된 경계로, 내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변방으로 남게 되었다. 이 지역은 국가개발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차원에서 변방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화 흐름에서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그리고 발전을 추동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환동해에서 형성되고 있는 관계성에 대한 각 행위자들의 인식은 상호 모순적이다. 지역의 관계성은 고정적이거나 실체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서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동해의 실재는 행위자들의 지정학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특정 시점에서 지역의 정체성은 행위자에 따라 갈등으로 또는 협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 대립과 갈등으로 환원되는 담론이 형성될 수도 있고, 협력과 신뢰의 과정으로 해석되는 담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환동해 행위자 간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관계성이 존재론적 측면에서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지역의 현상에 대한 인식 또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환동해에서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국가담론·민족담론·제국담론·갈등담론·중앙담론 등이 온존한 가운데 지역담론·협력담론·생태담론·지방담론·평화담론 등이 중첩되면서 그 양상이 복잡하다.

이 시점에서 상호 모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환동해 지역성 및 관계성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은 영토 중심 관점에서부터 연결망 중심 관점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런 현상을 종합

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본고는 환동해의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역성을 복합관계론적 존재론에 입각하여 개념화하고자 한다. 환동해의 복합관계망의 작동 기제를 밝히고, 구성되는 지역질서의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이 지역의 실재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된다. 관계론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장밋빛이나 잿빛이 아니다. 단지 인간의 비판적 사고 그리고 성찰성이 그 발전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II. 지역에 대한 관계론적 이해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권역, 지역, 처(處), 장(場) 등 다양하다. 오늘날 공간은 상호 관계성의 장, 복합관계망의 장으로 개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본적 복합관계망²⁾으로 개념화하면 지역은 다양한 층위의 관계망이 중첩되어 있는 장이다. 이런 개념화는 복잡계(complex system) 논리³⁾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논리에서 세상은 근본적으로 복잡하고, 복잡성 정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인간 사회는 다양한 관계에 적응하는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이다. 관계자들은 경쟁하거나 협동하면서 새로운 행동유형을 만들고, 외부 환경이나 다른 체계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진화해 간다. 여기서 행위자의 복수성, 관계의 복잡성, 관계망의 복잡성이 주요 개념이 된다.

2) 오늘날 관계망과 동의어로서 ‘네트워크(network)’에 대한 논의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용어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일반적 의미로, 또는 새로운 현상을 서술하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네트워크’ 개념은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시대적 맥락에서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네트워크 조직이론(Network organization)’, ‘사회-네트워크 이론(Social-Network Theory)’ 등에서 네트워크가 핵심개념이다.

3) 복잡(complex)이란 상대적으로 단순한 논리를 따르는 관계자의 관계 맺기 형태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개념어 복잡(複合, complexity)은 단순(單純, simplicity)의 반대말인 복잡(複雜, complicatedness)과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된다. 한국에서 번역어인 ‘복잡’ 및 ‘복합’이 문맥에 따라 종종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공히 ‘무질서 속의 질서’를 개념화하는 ‘complexity’에 대한 용어이다.

지역관계망은 지역질서, 자기조직성 그리고 중심성의 함수관계에 따라 형성된다. 여기서 지역질서는 지역 연계성과 중심성을 포괄하면서 관계 맺기의 법칙, 즉 지역 규범을 규정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특성과 지역의 시공간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계성은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과정⁴⁾으로 자기조직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연계성 논리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등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다. 중심성은 다양한 관계망 간의 관계 맺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권력이고, 그 결과 관계 맺기의 비대칭성이 형성된다.

공간을 개념화하는 과정에 존재론과 인식론, 실체론과 관계론, 단층성과 중층성, 평면성과 복잡성에 대한 논쟁점이 형성된다. 이런 논쟁점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분법적 구도에, 또한 더 근본적 수준에서는 존재의 층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도의 차이 등에서의 혼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대한 개념화에서 중앙보다는 변방, 주체보다는 연결, 실체보다는 구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유행하고 있다. 마야호로 관계론적 전환 또는 탈주체화 시대라 할 수 있겠다.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실체는 관계자 사이로부터 창발(emergence)된다. 관계망은 자기 표현적 성질을 생성하는 요소, 관계자(關係者)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관계자가 자기표현 상태를 자율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관계망 전체의 표현상태가 변한다. 또한 관계자는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속조건 아래 그 성질이 정해지게 된다.⁵⁾

지역의 현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실재론(realism)과 반실재론(antirealism) 논쟁을 벗어날 수 없다. 실재론에서 존재는 인식으로부터 독립한다. 반면

4) 지역화는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지역주의는 조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화는 사회와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초국경 교류 과정이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지역주의란 국가와 같은 관계자에 의해서 시도되는, 다자간 교류와 협력들의 제도화이다.

5) 이렇게 ‘장’은 ‘장소’ 속에서 관계자에 의해 자기조직되어 관계자의 활동을 종합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관계자는 ‘장소’를 매개로 해서 자기언급적인 ‘장’을 창출하고 이것을 자기의 구속조건으로 하고 있다. 관계자의 표현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자 간의 상호관계, 관계자와 장소의 관계이다(시미즈 히로시 2010, 32-33).

에 반실재론에서는 지각되는 것만이 존재하게 된다. 실재론자들은 지역 정체성의 단일성, 불변성, 고정성을 강조하고, 반면 구성주의자들은 그 정체성을 항상 변화한다고 이해하기에 그 복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 논쟁에서 존재와 인식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차원의 혼동’이 나타난다.⁶⁾ 존재론적 차원에서 존재는 인식과 무관하기 때문에 실재론이 정당하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스스로 인식조건과 무관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실재는 인식의 조건 아래 제약되고, 결국 언어에 제약되고 만다. 모든 인식은 존재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실재의 존재 유무는 인식론적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실재에 대한 인식은 그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관계론적 실재론⁷⁾이 호소력을 얻고 있다. 이 논리에서 존재론적 실재론, 인식론적 상대주의 그리고 판단적 합리성이 결합된다.

이 문제를 지역정치, 지역문제에 적용할 경우 매우 복잡한데, 이는 세계화, 민족성, 국가성, 국제관계, 지역질서, 지역정체성 등 많은 개념들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들이 실재하는가 아니면 인식행위에 따라 존재가 결정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 논쟁에서 반실재론은 인간의 경험 과정과 표상들의 조합으로 현실세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물리적 대상과는 달리 사회적 대상은 시공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초역사적 일반화나 법칙의 발견이 불가능하다. 결국 사회적 실재는 관계자의 실천에 따라 사회적으로 형성되기에 근본적으로 시공에 의하여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 실재가 장기 지속성, 구조의 내적 자기조직화로 준실재성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실재론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실재는 물리적 대상처럼 완전한 실재를 가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행동의 상호 작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하나의 패턴으로 고정된

6) 존재론과 인식론의 논쟁에 대해서는 이명현(2003), 노양진(2004)의 논의 참조.

7) 이 논리는 비판적 실재론, 경험적 실재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바스카(Roy Bhaskar)에 따르면 현상과 메커니즘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이 논리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궁극적인 배후 메커니즘인 실제적인 것(the real)과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것(the actual)과 관찰 가능한 경험적인 것(the empirical)의 영역들을 구분하고, 발현(emergence)을 인정하는 총화적이고 분화적인 존재론을 옹호하고 있다(마가렛 아처 편 2005, 18-19; 이기홍 1998, 183-185).

다면 물질 구조에 준하는 대상성을 획득하게 된다. 관념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라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되면 ‘물화(物化, reification)’ 효과가 나타나고 준실재성을 띠게 된다. 또한 사회적 실재에서 대상의 기초가 되는 단위가 인식자의 인식작용이 아니라 내적 구조의 자기조직화에 의한 것이라면 대상의 실재성을 가정할 수 있게 된다(전재성 2014, 342-343; 347-348 재인용).

실재론을 인정하더라도 실재(實在)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쟁으로 남게 된다. 이는 실체론(substantialism)과 관계론(relationalism)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실체론에서는 주체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다. 이 경우 모든 현상은 개별적 존재의 활동으로 인식된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관계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개별적 주체의 자기 확대로 간주된다. 반면 관계론에서 개별적 실체는 존재의 궁극적 형식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이다. 결국 주체는 연결 속에서만 실재이거나 비실재이며, 객체는 맺고 있는 연결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신용복 2014, 41).

한편 사유의 관계적 전환이란 현상 대부분을 관계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실재에 대한 관계론적 개념화이다. 이런 전환들은 실체론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환원적 사유체계라 볼 수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논쟁의 사유체계가 이분법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실체론 및 관계론은 다른 차원의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연속성에 대한 관점에서 구분된다. 관계는 어느 한 층위에서만 형성되는 평면적 활동이 아니라 다면적이고 복합적 활동의 산물이다. 특정 층위에 형성된 연결의 교차점에서 실체가 형성되며, 이 실체는 또 다른 관계망의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지점에 시점을 두느냐에 따라 실체가 실체론으로 또는 관계론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

실체론에 따르면 지역은 주권, 영역 개념으로 규정되며, 명확한 경계 및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단위이다. 이는 특정 시기에 형성된 관계의 특정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민족국가 형성 시기에는 실체론이 지배적이게 되고, 국가 중심의 영토성(territoriality) 및 민족 정체성이 지역 정체성의 핵

심적 구성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은 민족국가라는 스케일에 따라 절대적인 영역으로 개념화되고, 이에 기초하여 밖으로는 민족주의, 안으로는 중앙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민족국가 자체가 하나의 통합체·균질체로 인식되고 국가 자체의 개별성이 강조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는 실체의 확장·연장의 형태로 작용한다. 여기서 국내와 국외, 중심부와 주변부, 중앙과 지방 등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자리 잡게 된다(권세은 2014, 27).

지역은 다양한 관계들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장이다. 지역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실체론적 영토주의로 환원하는 논리는 현재의 시공간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동시에 영토와 구별되는 네트워크 논리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영토주의에 대척점으로서 흐름의 공간인 관계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특정 형태로서 고정된 장소인 영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식 단위인 ‘지역’을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상대적으로 개념화하면서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공간으로 인식이 요구된다(권세은 2014, 27). 다양한 장소, 영역,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과정은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사회-공간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가의 영역성, 사회 과정의 다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Ⅲ. 환동해의 재인식

지난 30여 년 동안 환동해에 대한 관심은 환상과 좌절 사이를 오가고 있다. 환동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주로 연안국 경제협력과 평화문제에 대한 소련의 관심,⁸⁾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중국의 관

8)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에서 ‘환동해’와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기사는 “蘇, 「環東海국제회의」 찬성 南北韓日美中共 참가”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경제협력과 평화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 일본, 미국, 소련, 중공 등이 참가하는 ‘環東海국제회의’를 개최하자는 도이 다카코(土井多賀子) 일본 사회당 위원장의 제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동아일보』 1988/05/07).

심9)에서 지역단위로서 환동해가 등장했다. 또한 환동해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1990년 중국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중국 측이 두만강 하구의 삼각지대를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당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구정모, 이현훈 1995, 20).

이 시기 환동해는 소련과 일본의 전략적 공간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정책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경제순환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지면서 일-소-한이라는 또 다른 잠재적 3각 관계 형성, 이른바 ‘환동해(일본해)경제권’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0) 한편 1990년대 소련 해체 뒤 새로 구축될 국제질서에서 가장 부상할 나라는 일본일 것이라는 시각이 형성되었다.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정 요구, 자위대의 해외파병 발판 마련, 일본을 중심으로 한·중·소·몽골 등을 포함하는 환동해경제권 구축 제안 등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매일경제』 1991/12/06).

환동해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동해연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 실시,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남북경제협력 추진 등 탈냉전시대가 오면서 ‘동해’는 긴장과 대립의 장에서 협력으로 장, 가능성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두만강개발협정’의 체결,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의 자유무역경제지구’의 선포, 중국의 ‘동북진흥개발

9) 중국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주임인 링싱광(凌星光) 씨의 발표에 따르면, 동북아경제권은 북측과 남측으로 나눌 수 있다. 북측은 ‘환동해(環東海)’경제권으로 소련 극동·흑룡강성길림양성·한반도·일본의 일본해(東海) 연안지역으로 블라디보스토크·하얼빈·부산·나가타가 중심도시이다. 남측은 ‘환황해(環黃海)’경제권으로 요녕·하북·산둥각성·남북한의 서해안·일본의 규슈지방으로 주요도시로는 천진·대련·청도·인천·후쿠오카·기타큐슈 등을 들 수 있다(『매일경제』 1989/04/04).

10) 고르바초프는 일본 국회연설을 통해 한국·소련·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동해경제권’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계획은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 소련의 자원, 중국의 노동력 등을 활용해 남·북 아메리카, 유럽공동체(EC)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소련이 침체일로에 있는 대일경제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주도하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한겨레』 1991/03/07).

계획'의 발표, 러시아의 '대블라디바스토크계획'의 발표 등 환동해권 역내 국가들의 지방개발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보다 분명해졌다. 하지만 지역협력은 교류 확대 및 제도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체화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및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산업기반과 교통접근성, 작은 시장규모, 열악한 제도적 환경 등과 같은 경제적 제약 요인,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 제약 요인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 이런 시도가 미래 가치에 대한 정책이라는 측면이 실질적 협력 측면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환동해' 개념이 국내에서 대중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일종의 유행처럼 등장¹¹⁾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역협력담론, 공동체담론, 지방발전담론이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의 관계론이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인식에서 실체론과 관계론 논리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환동해와 관련된 중앙 시점 또는 지방 시점의 국토개발, 지방개발 전략 공히 실체론에 기초하여 지역협력을 국가 또는 지방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한편 협력담론, 공동체담론, 생태담론에서 일종의 인자형(genotype) 관계론에 기초한 보편적 협력론이 지배적이었다.

환동해 관계성에 대한 실체론적 인식은 주로 세계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지방의 발전 정책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과거 이 지역은 국가라는 실체를 규정하는 경계로서, 중앙을 보호하는 방어막으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냉전 붕괴, 세계화와 같은 국제적 환경, 지방 균형 개발에 대한 관심과 같은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환동해지역이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¹²⁾ 지방 행위자의 주요 관심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11) 한국 네이버 뉴스 검색에 따르면, 환동해 관련 뉴스가 1988년 8건에서 2004년 332건, 2014년 1925건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구글 재팬(Google Japan) 뉴스 검색에 따르면, 환일본해 관련 뉴스가 2004년 2건에서 2007년 296건, 2014년 64,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환동해 연관 검색어(네이버)는 환동해권,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환동해경제권, 환동해시대, 동해안권, 환동해본부, 강원도환동해본부, 물류중심 등이고, 환일본해 연관 검색어(구글 재팬)는 環日本海, 環日本海經濟圏, 環日本海 逆さ地図, 環日本海 地図, 環日本海 經濟開發, 環日本海 經濟開發 期待 등이다(2015년 5월 25일 검색 기준).

산업구조 고도화에 집중되면서 ‘관계’의 영역은 주체의 확장으로 개념화되었다.

한편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탈경계, 초국가 개념이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동북아시아는 탈근대담론과 연계되면서 담론(discourse)의 대상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권세은 2014, 17). 그 주요 흐름은 대안문명론, 정체성론, 공동체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안문명론이나 정체성론은 문명론적·문화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¹³⁾ 동북아시아담론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구도에서 서구문명에 대한 극복이나 제3의 문명의 창조 및 근대 극복 방안으로서 동북아시아를 상징하고 또한 지역의 단일성, 일체성을 가정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다양한 상호 관계성의 범주화는 다수의, 그리고 중층적 동북아시아를 가정할 수 있다.¹⁴⁾ 다수의 아시아, 중층적인 동북아시아가 가정되면서 비판적으로 동북아시아가 탐구될 수 있다. 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형성되는 관계망은 환황해권, 환동해권, 중화권, 북방권, 해양권 등 다양한 동북아시아를 형성하게 된다. 동북아시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시

12) 1990년부터 다자간 정부 차원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2005), 동북아 에너지협력 정부 간 협의체(2005)가 형성되었다. 또한 환동해권 연안의 지방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 등 상호 협력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에서 환일본해학회(1994), 한국에서 한국환동해학회(1997)가 출범하는 등 환동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3) 문명담론에서 동아시아문명은 서양문명의 대안으로서 등장한다. 정체성담론은 문명론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문명론적 시각의 거대담론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동아시아 가치, 특성과 같은 ‘동아시아성’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문명·문화주의 사고는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일체성, 단일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차이, 변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동아시아의 통합 구상과 같은 기획의 속성이 강하다. 경제협력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경제공동체’ 논의, 패권을 견제하고 역내 제반 안보에 대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정치-안보 차원의 ‘안보공동체’ 논의, 사회-문화차원의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을 추구하는 ‘사회-문화 공동체’ 논의 등은 세계화 차원의 지역주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 이해를 내세우고 있다(박상수 2010; 박승우 2011).

14) 지역은 다양한 스케일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결성이 국지화되면서 장소를 만들어내고, 국지화된 사회적 관계가 권력관계의 작동에 의해 영역화되기도 한다. 사회와 공간 관계는 동시 다발적으로 중첩, 연계 그리고 결합되기에 동북아시아는 무한한 다중성을 가지는 사회적 공간을 가지게 된다(박배균 2012, 48).

공간적 특성 및 현실지리 개념을 반영할 경우 다양한 소지역이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오늘날 환동해가 인식 지역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상호 관계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념화할 경우, 환동해는 한반도,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지역, 몽골까지 포함하는 지역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물리적으로 동해에 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삶의 양식과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의 발전 방향이 동해지역과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 개념에는 통합된 환동해와 지방들의 환동해 두 가지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또한 행위자로서 환동해, 그리고 관계 공간으로서 환동해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IV. 환동해 복합관계망의 실제

세계화, 지역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와 세계,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역 등에서 관계 맺기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국제적·지역적 수준에서 국가 경계의 구분선이 약화되고, 교류 요소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한편 국내 수준에서 정치적 민주화로 낙후된 지방발전 관심을 받게 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협력을 선호하는 세력(시장,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⁵⁾ 지역은 자연적, 물리적 개념을 넘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개념으로 점차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환동해 관계망에는 영토화(territorialization)에서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까지 과정이 펼쳐지게 되었다.

지경학적 관계망에서 협력담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경제

15) 환동해에 대한 관심은 각국 내 낙후지역의 개발을 동해 연안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달성하려는 지방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출발했다. 환동해 협력은 자원(러시아, 몽골), 자본(일본, 한국), 기술(일본, 한국), 노동력(중국, 북한) 등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힘을 얻었다. 한국 지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가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교류가 1960년대 10건, 1970년대 18건, 1980년대에 61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 365건, 2000년대 685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환동해 지자체 간 교류는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1990년대 한중 수교 이후 급속히 증가되었다. “국제교류현황”, <http://www.gaok.or.kr>. (2015년 5월 10일 검색)

적 측면에서 관계 맺기는 세계화라는 조건하에 진행되었다. 지역화의 전개는 역내 국가들의 수출주도형 발전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의 무역 의존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¹⁶⁾

지정학적 관계망은 그 성격을 규정하는 지역적 조건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계성의 표현형(phenotype)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정학적 관계망에서는 영토성, 국민국가의 특성이 온존한 상태이다.¹⁷⁾ 중국은 해양팽창정책, 일본은 군사대국화정책,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적 재균형’ 전략, 러시아의 신통방정책과 같은 지정학적 정책들이 환동해에서 중첩되고 있다. 정치·안보적으로 지역질서를 규정할 수 있는 합의된 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간 관계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한편 지방차원의 관계망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지역적 특성이다. ‘두만강개발협정’이 체결된 후, ‘나진·선봉지역의 자유무역경제지구 선포’, ‘대블라디보스토크계획’, ‘동북진흥개발계획’ 등 환동해 연안지역의 국가적 수준의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지방 관계가 본격화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환동해의 지방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환동해 거점도시회의’,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해 지역의 중요한 관계자로 등장하고 있다.

환동해 관계망의 다양한 표현형은 모순적 형태로 나타났다. 관계망의

16) 한국을 중심으로 환동해 국가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지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서 2010년 수출 31.1%, 수입 32.0%가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수출 27.5%, 수입 26.2%가 중국과 한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경우 수출 12.0%, 수입 22.9%가 일본과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이창재 2011). 한편 1990년대 40%대에 머물던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60%대까지 상승했고, 2010년대에는 90%대까지 상승했다.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1990년대 10%대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 차츰 증가하여 2003년에 20%대를 넘어섰고, 2008년 30% 초반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1990년대 30%대에 머무르다가 2003년 이후부터 50%를 넘어서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일보』 2009/12/04).

17)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연례보고서(2014)에 따르면, 환동해 관련국인 한국(10위)을 비롯해 미국(1위)과 일본(8위), 중국(2위)과 러시아(3위)의 군비 지출 규모(2013)는 전 세계의 60%에 달한다. “Countries Ranked by Military Strength”, <http://www.globalfirepower.com>. (2014년 7월 7일 검색)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다. 세계화는 ‘현상으로서의 세계화’와 ‘정책으로서의 세계화’로 구분될 수 있다. ‘현상으로서 세계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부분,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나 지방 간 협력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세계화 흐름에서 동북아 각국들은 자신을 보장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세계화 흐름에 적응하는 측면이 있다.¹⁸⁾ 이런 맥락에서는 환동해에서 냉전의 종식이 국가주의, 민족주의 해체라기보다는 재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균열을 초래하는 존재론적 차원의 갈등은 탈국가담론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존재론적 갈등은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국민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다.¹⁹⁾ 종종 안보담론이나 지정학담론들은 이런 비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를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로 만들고, 이를 위해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환동해에 대한 관심은 점차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추진종합계획’, ‘장지투(장춘-지린-투먼)개발사업’ 등²⁰⁾은 중국의 동해 진출 계획과 연계되면서 단순한 지방개발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러시아도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 ‘러시아 교통전략 2020’, ‘2013년 극동·바이칼동부지역 경제사회 개발 연방 특별프로그램’ 등을 발표하면서 극동지역 개발과 환동해지역을 연계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극동지

18) 세계화를 수용할 것을 요구받는 국가들에서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재결집으로 이에 대응할 수도 있다.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에 대한 해체적 압력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 도전에 맞서기 위한 재국민화(再國民化), 재민족화(再民族化) 경향을 추동할 수 있다(조성한 2005, 338-339).

19) 대표적으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현실주의 논리처럼 동아시아 갈등이 모두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표면적으로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요인, 국제정치적 요인, 국내정치와 국내 갈등 요인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이남주·배기찬 2009, 389).

20) 중국의 지역발전계획은 공간구조의 최적화, 산업구조 혁신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전을 도모한다. 동북지역에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 ‘장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위한 중국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요강’ 등으로 중국 동북지방(하얼빈-창춘-선양-다롄 축)에 대한 개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낙후된 동북지역을 개발하고 북한을 통한 해양(동해)으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여 환동해지역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최우길 2010).

역의 경제특구 조성 등 기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선도개발구역(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²¹⁾을 조성하여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인구감소 문제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 이른바 ‘지역, 사람, 일자리의 창생 종합전략[地方創生]’²²⁾을 정부의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동해안 지방정부들은 1990년대부터 ‘환동해권 카르텔’ 구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21세기 신경제비전’ 등 환동해와 연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부산은 해륙복합물류 수송 관계망에서 그 기점으로 자리 잡으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환동해로 발전의 방향을 찾고 있는 지역들은 공통으로 교역,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환동해권 관문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²³⁾ 지방정부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은 교류협력의 확대, 관광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의한 환동해 구상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소규모 수준이어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북극해 항로와 에너지망, 해륙복합물류망 등과 관련하여 한반도 전체를 환동해 물류·에너지 연결망의 허브로 발전시키고 각 지방들을 그 전초기지로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21) 러시아 극동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도개발구역법이 2015년 발효되면서 극동지역개발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제안은 극동 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아태지역 외교정책의 추가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2015년 최초로 하바롭스크(Хабаровск), 콤소몰스크(Комсомольск), 나테즈딘스카야(Надеждинская) 3개 지역 프로젝트, 6개 투자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http://minvostokrazvitia.ru>. (2015년 2월 12일 검색)

22) 전후 일본의 지방정책은 ‘경제주의’, ‘중앙집권주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은 지방이 갖는 자원의 활용에 기반을 둔 지역개발정책이라는 점에서 지방시점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마치(まち)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지방을 의미한다. 지방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방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기존의 지방정책과는 구분된다(이창수 2015, 2-13).

23) 포항은 환동해 해륙물류네트워크의 전초기지로 자리 잡아 경북과 환동해 각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울산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즉 에너지협력분야, 지하자원협력분야, 물류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환동해를 연결하고 있다(강영훈 외 2009, 50). 부산시는 환동해, 환황해권, 한일해협권 물류네트워크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금성근 외 2012). 강원도는 환동해권 자원교역, 물류, 교통 등에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할 시점이다.

환동해에 대한 정책이 지경학적·지정학적 성격을 넘어 종합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그 논의 과정에서 두 측면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이 지역에는 다양한 관계, 관계망의 관계 맺기의 원칙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규정할 지역질서 형성을 둘러싼 복잡한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²⁴⁾ 미국에 의해 설정된, 기존의 지역질서가 변하면서 그 경향이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그에 따른 정치적·안보적 위상 강화는 지역질서²⁵⁾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지역의 관계성이 증대되어 가면서 복잡성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환동해 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과거 민족국가 중심, 중앙중심 논리를 확대하는 담론과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하는 담론이 섞여 있다. 오늘날의 환동해 실재가 피상적으로 보면 과거 현실주의가 지배하던 지정학적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환동해 지역질서가 관계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세계화시대에서 관계망은 민족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민국가 형성기에는 관계성을 특정 영토에 가두는 닫힌 관계망이 형성되었다. 닫힌 관계망에서는 위계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국가담론과 지역담론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 규범 형성을 둘러싸고 관계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환동해의 시공간에서 관계의 다양한 성격들이 중첩되면서 그 지역성이 설정되고 있다. 이 관계

24) 관계 맺기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망들이 중첩된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상호 교차하고 있다.

25) 근대 이전에 환동해 질서는 북방세력과 중화세력의 길항관계에서, 근대시기에 접어들면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길항관계에서 형성되었다. 근대 이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할 때 환동해는 거대 세력을 구분하는 경계면이자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이 공간은 주로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강조되면서 북·소·중 사회주의세력과 한·미·일 자본주의세력이 충돌하는 교두보로 인식됐다. 이념을 기초로 대립하던, 자본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 간 대립은 한 축을 형성했던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해소되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관계성은 해양세력(일본, 미국), 중화세력(중화권), 북방세력(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의 집점에서 형성되고 있다.

설정이 지역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지역의 연결성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상호 연결성의 경계를 정하고 관계 짓기를 규정할 지역 규범의 성격을 둘러싸고 주요 관계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성격은 과거 실체적 관계가 지배하던 시대의 경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V. 결론

학문적 논쟁이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체/관계, 중앙/지방, 해양/대륙, 문명/야만, 진보/열등 등과 같은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는 경험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론화된 사유의 산물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가 배제된다. 이는 서로 다른 차원이나 층위의 대한 혼동에 기인하기도 한다. 한편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연속성을 띠는 복합적인 활동의 산물인 경우나 비물질적인 사회적 현상인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이런 경향은 환동해지역의 관계성, 지역성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환동해의 지역성을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로 환원하거나 세계주의 및 공동체주의 등으로 환원하는 논리에서 이런 이분법적 구도가 발견된다.

지역은 다양한 관계 맺기가 형성되고, 관계망이 중첩되는 장이다. 관계적 존재론에 따르면 공간은 그 자체가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로 구성된다. 관계는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장을 전제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여러 층위가 존재한다. 이럴 경우 그 성격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탐색은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환동해 지역성은 특수한 시공간의 산물이다. 환동해지역에는 시대적으로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사회적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재로서의 장이다.

세계화시대에 상품, 사람, 자본, 정보의 초국경적 이동은 기업, 시민사회와 같은 국가 이외의 관계의 행위자, 즉 관계자의 등장을 가져왔다. 점차 권력은 단순히 영토를 통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문제,

영토적 경계를 뛰어넘어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힘을 신게 되었다. 다양한 관계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계속 경쟁할 것이다. 이 관계망은 다양한 층위에서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중첩된 실재에 대한 이해에서 다른 층위의 특성들을 혼동하거나 또는 동일한 현상의 일부와 상이한 측면을 동일시할 경우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다. 실재의 특정한 부분들에 대한 귀속적 추론을 위한 주장이나 논리들에서 이런 개념화 오류가 발견된다.

환동해 관계자들은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성, 힘의 논리를 요소로 하는 실체론에 기대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세계화 경향에 반응하면서 협력을 증시하는 관계론을 수용하고 있다. 실체론에 따르면 환동해에서 지역주의는 민족국가의 외연적 확대 정책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지역주의 논의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국가주의가 강조된다. 이는 역내 관계자가 지역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세계화 현상에 적응하려는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간주된다. 관계론에 따르면 세계화는 시대적 추세이고, 환동해 지역협력은 더디지만 보편화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실체론과 관계론이 혼재되어 있다. 복잡적응체계인 사회에서 관계자들이 힘을 강조하는 실체론 또는 지정학적 현실주의 논리에 기대거나 이분법적 지정학 코드를 답습할 경우, 지역의 갈등과 분쟁이 보편화될 것이다. 반면에 아직은 힘과 세력 균형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가 온존한 환동해에서 평등한 네트워크 논리 또는 이상주의적인 협력 논리에만 기댈 경우 그 협력의 현실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지역의 관계성에 대한 표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환동해에서 구성 요소 간의 협력과 갈등의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질서변동의 시기에 그 복잡성은 더욱 증대되기 마련이다. 과거 관계망에서 설정되었던 환동해 지역 규범이 해체되고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질서에 의해 조정되었던 관계자들의 이익이 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세계-지역-지방 스케일에서 관계의 결합과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국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의 갈등과 협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관계의 영역이 복잡해질수록 관계자들의 협력과 갈등의 정도는 심화되고, 변화는 점점 빨라지게 된다. 관계가 지역적으로 통제되는 국가화 과정과 관계가 확대되는 세계화 과정이 중첩되는 현시점에서 지역성은 복합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시공간적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환동해 지역의 관계성 즉 지역성은 보편적으로 유형화될 수 없다. 특히 세계화-국가화-지역화의 중층성 정도가 심한 환동해에서 관계성에 대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지역주의 협력’으로의 논리적 환원이 종종 정당화되지만 전체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환원주의 논리, 단순성 논리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에 대한 복합관계망의 개념화이다.

| 참고문헌 |

- 강영훈 외 (2009). 『환동해경제권과 울산의 발전전략』. 울산발전연구원.
- 구정모·이현훈 (2001). “동아시아의 신지역주의: 상위지역협력과 하위지역협력 간의 관계.”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2호.
- 권세은 (2004). “복잡성 패러다임의 개념적 이해.” 『시민정치학회보』. 시민정치학회.
- _____ (2014). “왜 비판지역학인가: 환동해학의 인식체계.” 『환동해지역의 비판적 성찰』. 경희대학교출판원.
- 김성근 외 (2012). 『환동해경제권 협력강화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김상배 (2012). “복합세계정치론의 이해.” 하영선 외.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올아카데미.
- 노양진 (2004). “실재론과 반실재론을 넘어서.” 『철학분석』. 창간호.
-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 박상수 (2010).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 동아시아 연구, ‘초국가적 공간’으로부터 접근하자.” 『아세아연구』. 제53권. 제1호.
- 박승우 (2011).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 리뷰』. 제1권. 제1호.
- 변현섭 (2014).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의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망.” 『슬라브 연구』. 제30권. 제4호.
- 송영관 (2014).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KDI FOCUS』. 47호.
- 신용복 (2014). 『강의』. 돌베개.
- 이기홍 (1998). “실재론적 과학관과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경제와 사회』. 제39권.
- 이남주·배기찬 (2009).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 이명현 (2003). “실재론-반실재론 논쟁의 함정의 피안: 신문법을 지향하며.” 『철학사상』. 제16권. 제3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이창수 (2015). “일본의 지방창생 프로젝트와 환동해 연구.” 2015년 HK국내학술회의 자료집.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이창재 (2011). “한중일 FTA: 전망과 과제.” 『한중일 FTA의 경제·안보적 함의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자료집.
- 진재성 (2014).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존재론, 인식론 논쟁과 성찰적 이론의 발전 가능성.”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2호.

- 조성환 (2005). “세계화시대 동아시아 민족주의: 신민족주의의 분출과 동아시아주의적 모색.”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2권. 제2호.
- 최우길 (2010). “중국 동북진흥과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개발계획: 그 내용과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57권.
- 마가렛 아처 외 편 (2005). 『초월적 실재론과 과학』. 이기홍 역. 한울.
- 시미즈 히로시 (2010). 『생명과 장소-창조하는 생명의 원리』. 박철은·김강태 역. 그린비.
- 피터 L. 버거·토마스 루크만 (2013). 『실재의 사회적 구성』. 하홍규 역. 문학과지성사.
- Ikenberry, G John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May/Jun, pp. 80-90.
- Mead, Walter Russell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 pp. 69-79.
- 『동아일보』. 1988년 5월 7일; 『매일경제』. 1989년 4월 4일; 『매일경제』. 1991년 12월 6일; 『한겨레』. 1991년 3월 7일; 『한국일보』. 2009년 12월 4일.
- “국제교류현황.” <http://www.gaok.or.kr>. (2015년 5월 10일 검색)
- “Countries Ranked by Military Strength.” <http://www.globalfirepower.com>. (accessed on July 7, 2014)

| 논문투고일 : 2015년 05월 30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06월 04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06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2 (2015)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Complex Network of East Sea Rim

Se-Eun Kwon

(Dept. of Russian, Kyung Hee Univ.)

This paper attempts to conceptualize regionality of East Sea Rim based on the notion of a complex relationship and its network. Modern philosophy demands more weight to be put on the notion of a relationship than the notion of substantiveness in such a study. Relational conceptualization is widely accepted in the discussion of region as an entity and perception.

There is a multiplex of actors such as the state, market, civil society and locals that interact at global, regional, state and local levels. There is multiple stratification of the process of nation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However, the perception on a region's multi-layered relationship varies from the center of entity to its connectivity. As the notion of region has expanded from territory based idea of nation-state to network-oriented supranational concept, discourse on special aspect of region has also been justifi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uch a new perspective that can explain this development in more comprehensive terms can be found in such theoretical terms as multi-layered and multi-dimensional regionality of East Sea Rim.

- Key words: East Sea Rim, Regionality, Relationalism, Complex Network, Relational Ontology